

경제학

1	2	3	4	5
②	①	①	③	①
6	7	8	9	10
③	③	③	②	①
11	12	13	14	15
②	④	④	②	③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②	③

1. ②

재고투자의 감소는 그 연도의 GDP를 감소시킵니다.

- ① 생산에 사용될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고정투자에 해당합니다. 내가 '사용'하려고 구매한 고정자산은 유형자산이지만, 내가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면 그건 고정투자입니다. 경제학보다는 회계학에서 강조되는 개념인데, 정말로 구석 먼지까지 털어 냈네요.
- ③ 가계의 아파트 구입은 GDP의 투자계정에 해당합니다(소비지출 아님!).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해 연도에 건설된 신축주택을 구매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즉 여기서는 '신축'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미 건설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매수인에게는 (+)의 투자가 되지만 매도인에게는 (-)의 투자가 되어서 상쇄되어 버리고, 따라서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 ④ 재고투자는 그 성격상 유량(flow) 지표로 보아야 합니다.

2. ①

케인즈에 의하면 경기의 침체는 총수요 감소로 인한 유휴설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 ② 확대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자율 하락과 소득 증가입니다. 통화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LM곡선이 수평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IS-LM모형을 가정한다면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 ③ 케인즈의 주장의 핵심은 불황에서는 총수요의 증가를 위해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④ 재정정책은 주로 행정부 내부의 정책적인 것이므로, 행정부 내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며 승인을 받기까지의 내부시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외부시차보다 내부시차가 더 큰 것으로 봅니다.

3.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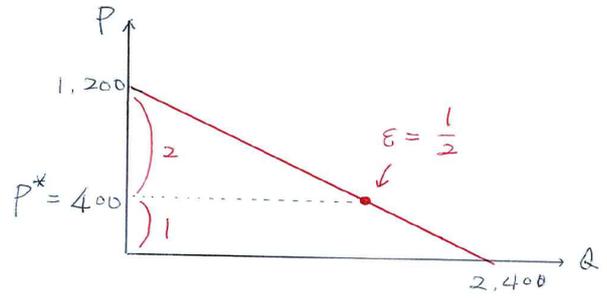
- ㄱ. A안 기대수익은 $0.9 \times (100) + 0.1 \times (50)$, 즉 95만원입니다.
- ㄴ. B안 기대수익은 $0.5 \times (200) + 0.5 \times (-10)$, 즉 95만원입니다.
- ㄷ.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성공시의 수익과 실패시의 수익이 더 적게 차이나면서 기대수익은 같은 A안이 위험회피자가 선호하는 안입니다.
- ㄹ. 명백히 B안의 기대수익에 대한 위험(실패 경우의 손실)이 A쪽에 비해 더 큼니다.

4. ③

1달러로는 연필을 한 자루 살 수 있고, 1달러와 등가의 5위안으로는 연필을 2.5자루 살 수 있으니 미국 연필 1개당 중국 연필은 2.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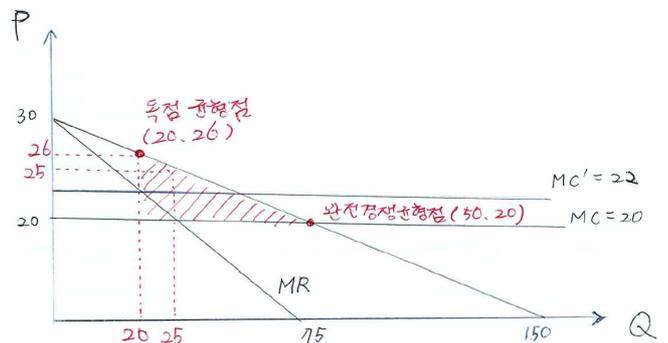
5. ①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지만 이것만큼은 기본적인 문제네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계산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6. ③

독점으로 인한 균형점은 $MR=MC$ 에 의해 $P=26, Q=20$ 으로 계산되며, 애초에 완전경쟁시의 균형점은 $P=MC$ 에 의해 $P=20, Q=50$ 입니다. 따라서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후생손실은 아래 그림에서 빗금친 빨간 삼각형 부분이며, 넓이는 90이네요.



7. ③

-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 ㄱ. (X)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은 IS-LM모형에서 IS곡선이 수직에 가깝게 가파른

상태이고, AD-AS모형에서는 AD곡선이 수직에 가깝게 가파른 상태입니다. 즉, 케인스스러운 상황이지요.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는 큽니다. 7은 명백히 틀리고, 선택지 중에 7이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답이 될 수 없으니 이것만으로도 ③이 답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ㄴ. (○)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은 상황은 케인스적인 상황으로 AD곡선이 가파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유가상승으로 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크게 증가합니다. (AD-AS모형에서는 세로축이 물가입니다)

ㄷ. (○) 같은 상황에 대해 계속 물어보네요. IS곡선과 AD 곡선이 가파르게 그려지는 케인스적인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입니다.

8. ③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은 하락하겠네요.

9. ②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에 맞춰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기준점, 즉 목표 물가상승률을 딱 정해놓고 이를 실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목표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목표 물가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서 실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통화정책을 펴야겠지요.

10. ①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에는 아래의 3가지 이론이 있는데, 아래의 내용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ㄱ. 기대이론 : 시장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하는 미래 단기이자율이 장기이자율을 결정한다는 주장으로,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 간에 완전한 대체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장기이자율은 단기이자율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투자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즉 장기이자율은 단기이자율의 기하학적 평균과 같을 때 시장참가자들은 이 둘을 무차별적으로 본다는 주장이지요.

ㄴ. 시장분할이론 : 단기이자율과 장기이자율은 특정 만기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선호도가 결정한다는 주장으로,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 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기이자율과 장기이자율은 각각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

ㄷ. 유동성프리미엄이론 : 장기이자율은 평균적인 미래단기이자율에 현금보유를 포기하는 대가(=유동성 프리미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이론. 따라서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 간에 대체관계는 존재해도 그 둘은 완전대체제는 아니며, 현금보유를 포기한 대가의 합의 크기에 따라 장기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이자율은 현금보유 포기의 비용이며 유동성프리미엄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 선택지 ①은 이자율 기간구조 이론 중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과 유동성프리미엄이론에 대한 설명을 교묘하게 섞어서 틀린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7급 공무원 시험의 그간의 전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문제는 너무 과한 수준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 ②

이자율평가설은 자본수지의 관점에서 균형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움을 전제했을 때 차익거래에 의한 외환수요 변화에 따라 환율은 국내투자수익률과 해외투자수익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즉, 국가 간 자본은 이자율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① (×) 외국의 명목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의 명목이자율이 증가하면 외국에서 자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는 자국환율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② (○) 외국의 명목이자율과 자국의 명목이자율이 고정되었을 때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외국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즉 환율이 오르기 전에 외국화폐로 바꾸려 할 것이므로) 외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③ (×) 구매력평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 이자율이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 이자율이 높은 나라에 투자할 경우 국가 간 자본 이동으로 인하여 환율은 변동하는데, 이 때 두 국가 사이의 이자율 차이를 완전히 상쇄시켜 투자수익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균형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일 뿐, 이자율평가설에서 실질 이자율이 항상 1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고로 구매력 평가설에서는 실질환율이 항상 1이지만 그것은 별개의 다른 얘기입니다.

12. ④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조세 또는 채권)의 변화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 만약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소비수준을 설정하거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는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 (×) 완전고용 적자(full-employment budget deficit)는 경기순환이 조정된 재정적자(cyclically adjusted budget deficit)라고도 부릅니다. 재정적자 규모는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소득수준의 변화에 의해 경기가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배제하고 재정적자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완전고용적자라는 개념을 개발하였지요. 완전고용재정적자는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있을 경우 나타났을 가상적인 재정적자 규모이며, 경기순환상에서의 현재 위치가 불황인지 회복인지 호황인지 후퇴인지는 알려주지 못해요.

② (X) 균형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즉 균형예산 준칙하에서는 정부가 지출행위를 많이 했다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세 크기에 따라 조세의 사회적 비용(후생손실)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③ (X) 리카도의 대등정리를 지지하는 배로(Barro)는 민간이 보유한 국채는 순자산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민간이 국채를 통해 얻는 이자수익을 전부 정부가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뺏어가기 때문이죠. 또한 배로는 재정정책을 펼치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여 이자율 상승에 대한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리카도 대등성 정리에 의하면 저축의 증가를 통해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이자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보았던 거죠.

13. ④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 인하는, 본질적으로 은행의 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 가계의 입장에서는 저축의 메리트가 별로 없죠. 따라서 ④는 틀린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초과 자금을 대해서는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겠다고 할 것이기에 ①번은 맞는 말입니다. ②, ③은 통화확대 정책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14. ②

이 문제는 아래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tau = (1 - \theta)\beta + \theta\alpha$
τ :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θ : 민간투자자금
α : 세전 수익률
β : 세후 수익률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를 위의 공식에 대입하면 $\tau = (1 - 0.4)(0.1) + (0.4)(0.15) = 0.06 + 0.06 = 0.12$ 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해지긴 하는데, 여기서 분명 수험생 분들은 한마디 버럭 하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나 그런 식 본 적 없어!” 하고요. 네,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누가 그것까지 알고 들어왔을까요. 저 역시도 어떤 공무원 경제학 수험서에서도 이걸 다른 책은 본 적이 없고, 기출에서도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현장에서 사고력을 발동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전혀 아니고, 그냥 대놓고 이견 위식을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라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견 출제자가 공무원시험 출제 경험이 일천하거나, 경제학원론에서 다루는 범위를 혼자만 자의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한 번 나왔으니깐 아마도 내년부터는 각 기본서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험을 보러 갔던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죠. 솔직히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민망해서 정말이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죄송해요. 해설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이 괜히 죄송하네요.

15. ③

① (O) 이 문제에서 교역재는 오직 자동차뿐인데, 갑국과 을국간에 자동차 1대의 가격이 10단위로 동일하므로, 교역재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갑국 통화와 을국 통화 간의 교환비율은 1:1입니다.

② (O)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서 표준적 소비바구니가 자동차 1대와 돌봄서비스 10회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에 따르면, 갑국의 경우 자동차 1대는 가격 10단위, 돌봄서비스 1회당 가격 2단위이므로 표준적 소비바구니의 가격은 30단위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을국에 대해서는 표준적 소비바구니의 가격이 20원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표준적 소비바구니 자체에 구매력평가설에서 말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갑국 통화 3단위와 을국통화 2단위가 등가라는 의미입니다.

③ (X) 교역재만을 대상으로 하면 양국의 통화 교환비율은 1:1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는 구매력평가설에 근거한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화 교환비율이 같다고 해서 자동차의 가치가 갑-을국 양쪽에서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나면, 한국에서 자동차가 100만 원에 팔리고 미국에서 100만 달러에 팔린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자동차 가치와 미국에서의 자동차 가치가 같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을국의 1인당 GDP가 갑국의 1인당 GDP의 1/10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하고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험생들 보고 시험장에서 이걸 사고해서 판별 하라고?

④ (O) 구매력평가설에서는 일물일가를 가정하므로, 자동차와 돌봄서비스의 가격이 갑-을국간에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의 경우 갑국의 생산력이 을국보다 정확히 10배 높고, 돌봄서비스도 갑국의 생산력이 을국에 비해 정확히 10배 높

습니다. 따라서 영국 1인당 GDP는 갑국 1인당 GDP의 1/10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원래 비교역제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국제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표준적 소비바구니에 포함시켜 놓고 구매력평가설에 근거한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너무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16. ②

수요함수를 자연로그로 표현했을때의 장점은, 아무런 계산이 필요 없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그항의 계수가 곧 탄력성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넛 수조차 없는 문제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못 푼 게 전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물어오면 답이 없어요. 일단 시험은 끝났으니, 왜 그런지나 살펴보도록 하죠.

주어진 식 $\ln Q^d = \beta_1 + \beta_2 \ln P + \epsilon$ 를 $\ln P$ 로 편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상수항인 β_1 과 ϵ 은 소거되고 $\frac{\partial \ln Q^d}{\partial \ln P} = \beta_2$ 가 되는데요.

여기서 착안해야 하는 것은 $\frac{d \ln x}{dx} = \frac{1}{x}$ 라는 미분식입니다. 이 식

을 변형하면 $d \ln x = \frac{dx}{x}$ 이고 즉 $\partial \ln x = \frac{\partial x}{x}$ 라는 것이고, 즉

$$\frac{\partial \ln Q^d}{\partial \ln P} = \frac{\frac{\partial Q}{Q}}{\frac{\partial P}{P}} = \frac{\partial Q}{\partial P} \cdot \frac{P}{Q}$$

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은 곧 수요

의 가격탄력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 $\ln Q^d = \beta_1 + \beta_2 \ln P + \epsilon$ 에서 로그항의 계수인 β_2 가 곧 수요의 가격탄력성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답은 바로 ②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따라내려오시다가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글썽 무려 공무원 7급 시험의 문제이고, 내년부터는 각종 기출문제집에 실려나갈 판입니다. 참으로 이를 어찌면 좋습니까? 수학에서 자연로그 미분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쪽을 편미분하는 생쇼(?)까지 해서 탄력성 값을 찾아내야 하는 이 문제를 자력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런 사람이 참으로 펍도 고작 공무원 7급 시험이나 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해설이나 만들어 올려 놓고 사라지려 해도 도무지 그럴 수가 없게 만드네요.

17. ④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7월, 44개 연합국의 통화금융 회의가 개최되어 IMF와 IBRD 설립안이 확정되었고, 국제통화체제로 미국이 보유한 금과 각국의 공적 보유 달러를 일정비율(금1온스:35\$)로 교환하는 금환본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각국의

통화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합니다. 이것이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국제유동성 문제와, 기축통화인 달러화 신용의 계속적 실추로 붕괴과정에 접어들었고 마침내 미국이 1971년에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하며 와해됩니다. 그리고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금 공정가격의 철폐와 변동환율제 등이 선진공업국들 사이에 논의되면서 킹스턴 체제로 변화합니다.

그 후 1985년, 뉴욕에서 미,독(서독),영,일,프 5개국이 상호 환율 조정을 위한 플라자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강력한 달러가 곧 강력한 미국'이라는 기치 하에 고평가되었던 달러화의 가치가 일본(엔)과 서독(당시 마르크)에 대비하여 약 70%정도 평가절하 추진됩니다. 반대로 일본의 엔화와 서독의 마르크화는 엄청나게 평가절상되었고 국제금리의 하락, 국제원유가 하락 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전두환 정부 때의 일인데, 우리나라도 이로 인한 3저 현상(한국사에서 들어보셨죠?)으로 인해 반사적 이익으로서 경제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아마도 기본서에 있었을 것이고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문제는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걸 눈에 바르고 가진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도 평균점수를 깎으려고 구석 내용을 털어 낸 것 같습니다.

18. ①

이 문제는 성장회계공식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text{갑국}] \text{노동증가율}(10\%) \times 0.5 + \text{자본증가율}(20\%) \times 0.5 = 15\%$$

$$[\text{을국}] \text{노동증가율}(10\%) \times 0.3 + \text{자본증가율}(20\%) \times 0.7 = 17\%$$

즉, 갑국의 $\frac{\Delta A}{A}$ 가 을국에 비해 2%가 더 커야 양국의 $\frac{\Delta Y}{Y}$ 가 같아질 것입니다.

19. ②

주어진 식 $Y = [K(1-u)L]^{\frac{1}{2}}$ 에서 양변을 L 로 나누면

$$\frac{Y}{L} = \frac{[K(1-u)L]^{\frac{1}{2}}}{L} = \sqrt{1-u} \left(\frac{K}{L}\right)^{\frac{1}{2}}$$

즉 $y = f(k) = \sqrt{(1-u)k}$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y 는 1인당 생산량, k 는 1인당 자본량을 나타냄)

한편, 솔로우의 균제상태에서는 $sf(k) = (n+d)k$ 가 성립하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0.1y = (0.1 + 0.1)k, \text{ 즉 } 0.1 \sqrt{(1-0.04)k} = 0.2k \text{에서}$$

$$\sqrt{0.96k} = 2k, \text{ 즉 } \sqrt{k} = \sqrt{0.24} \text{가 되어 } k = 0.24 \text{입니다.}$$

따라서, 1인당 생산량 y 는

$$y = \sqrt{0.96k} = \sqrt{0.96 \times 0.24} = \sqrt{4 \times 0.24 \times 0.24}$$

$$= 2(0.24)$$

$$= 0.48$$

20. ③

청소하기를 선택할 때의 비용이 10이라고 하였으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제하고 매트릭스를 다시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을	
		청소하기	쉬기
갑	청소하기	(3, 3)	(1, 11)
	쉬기	(11, 1)	(2, 2)

여기서 출발점은 갑·을이 양쪽 다 '청소하기'를 택하는 (3, 3)인데, 한 명이 청소를 안 하고 쉬기를 선택하면 그 사람의 효용은 11이 되는 것이지요. 즉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8만큼 효용이 증가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1로 감소해 버립니다. 여기서 1로 감소한 사람이 보복을 선택하면 쉬기-쉬기가 되어 곧 위의 매트릭스에서 (2, 2)가 되고, 결국 처음 (3, 3)보다 1만큼 양쪽의 효용이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이 보복기간으로 인한 효용감소가 애초의 일시적 효용상승분인 8보다 커야 하므로, 보복기간은 최소한 9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효용'이란 통상적 저항개념이 아닌 일주일이라는 단위기간 동안의 효용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빠르게 떠올려 내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 해설자 총평 ◆

시험 출제자의 재량은 당연히 그 자신만의 고유영역으로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출제자의 도를 넘은 무책임성까지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출제자는 경제학 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니라 경제학·지방자치론·지역개발론 중 하나 선택하는 것임을 과연 알고는 있었을까요?

최소한 이것이 선택과목임을 생각한다면, 과목선택의 불이익이 너무 심한 수준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고민 정도는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난이도는 원래가 주관적인 것이고, 경제학-지자론간의 유불리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어떻게 내도 서로 다른 과목을 완벽하게 똑같은 난이도로 구성할 순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말도 안되게 쉽게 나온 지방자치론에 비해 말도 안되게 어렵게 나온 경제학을 만들어 놓고는 아몰랑 하고 아무런 고민조차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생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서로간의 차이를 줄여 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남자랑 여자는 다르니까!' 여러분의 남친(여친)이 이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수험생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시험의 문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수험생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학 시험의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어 문제를 위한 문제,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로 구성이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실력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책상에 앉아서 자기가 낸 문제로 피눈물을 흘렸을 수험생들을 상상하며 씩소를 날렸을 출제위원이 참 한심스럽고, 화부터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행도, 데이트도, 취미생활도 모두 다음으로 미루며 하루하루 불안감을 가슴에 안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졸린 눈을 비벼 가며 공부한 수험생들 정말 어쩌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이 경제학이 이유가 되어 탈락했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출제, 내가 기울인 노력만큼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의 박탈. 이 수준 떨어지는 출제에 총평을 써 주기조차 아까워서 혼자 분풀이를 해 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피땀을 쏟은 분이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 가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시험이 아닙니다. 최소한 선택과목을 출제하는 사람한테는 그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는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시험의 출제자가 다시 출제에 섭외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공무원 시험은 모두 끝났으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셨더라도 아무쪼록 다음을 위해서라도 공부는 당분간 잊고 폭 쉬셨으면 합니다. 원드서핑에서 넘어지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힘든 것처럼, 고통으로 가득한 바다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난 시간들을 살아낸 여러분의 모든 순간 자체가 성취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개 떨구지 마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최선에 실망할 자격은 없습니다.

해설 : 잘하고있잖아

- 2016년 서울시7급 수석합격 (일반행정7급)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 다음카페 9공사 칼럼니스트
 - 2017년 임용, 현 서울특별시 소속 재직 중
- ※ BLOG : <http://blog.naver.com/myvagabond>